

교육발전특구,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 지방소멸 위기 극복

교육부-지방시대추진계획 발표

교육혁신·지역인재 양성·정주 지원 의대 포함 대학지역인재전형 확대 30억~100억 사업비 검토할 예정

정부가 '공교육 강화'를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지역인재가 그 지역 학교로 진학하고 취업·창업을 통해 해당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발전전략을 제시하면 정부가 이를 심사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할 방침이다. 선정된 지역은 내년부터 3년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내년 시범지역 선정... 3년간 운영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아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발전의 큰 틀에서 교육혁신과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다.

이는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하나로, 위원회는 지난 9월 14일 지방시대 비전 선포식에서 '인재를 기르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발전특구 추진계획 시안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

는 담대한 교육개혁'이라는 기본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당초 '교육자유특구'라는 명칭을 사용했지만, 이번 시안에서 교육발전특구로 변경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을 통한 지역발전을 추구한다는 정책목표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명칭을 바꿨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 본격 운영에 앞서 정부는 시범운영을 우선 실시한다. 지역의 다양한 특례 수요와 우수한 특구 운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한 시범운영은 지정

규모(개수)를 사전에 정해두지 않고, 공모 심사과정에서 유형별 특구신청현황과 추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추후 단계적으로 결정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운영 기간은 3년이다.

특구지정 신청단위는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1유형과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하는 2, 3유형으로 운영된다. 유형별로 복수의 광역(기초)지자체가 연합해 공동 참여도 가능하다.

장 차관은 "교육발전특구 이야기가

나온 초창기부터 미리 준비해 온 지자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재원과 내용, 준비도가 다를 수 있다"라며 "우선 골고루 신청받아서 (선정 과정을 거친 뒤) 시범운영을 하도록 열어주는 게 기본적인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교육 강화로 지역 정주 여건 강화... '지역인재전형' 확대 기대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되면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할 수 있다. 지자체와 교육청은 해당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등, 대학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한다. 이를테면, 특구 내 대학은 선호도가 높은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늘리고, 초·중·고교는 학생과 학부모 선호도가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정부는 의대를 포함한 대학 지역인재전형 확대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구 내 대학은 의대뿐 아니라 학생 선호도가 높은 첨단학과 등에서도 지역인재전형 선발을 확대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역 졸업자가 지역산업에 특화된 기업에 취업이 용이하도록 고교 단계부터 관련 과목들을 구성해 수업하고 이를 통해 길러진 인재가 그 지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구상"이라며 "특화된 지역인재가 맞춤형으로 지역 기업에 취업해 정주할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범 운영 단계에서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재원을 우선 투입해 30억~100억원 안팎의 사업비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단, 특구별 지역교육 발전계획 내용에 따라 사업비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기존 운영되는 사업 간 연계도 강화한다.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교육국제화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해 운영 성과를 높일 예정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협력하는 우수 사례를 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hji@metroseoul.co.kr

서울시-SH공사, 반지하 주택 줄인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상시 접수 연면적 또는 세대수 20% 이상 공공임대주택 건립 시 인센티브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용적률, 건축규제 등을 완화해주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반지하 주택을 줄여나간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상시 접수를 통해 대상지 총 100곳을 선정, 정비를 추진한다는 목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2명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가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전체 연면적 혹은 세대수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건립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여기에 건축규제 완화를 추가로 적용하면 개별 필지별 신축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해져 반지하 주택 정비를 촉진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사업지 내 '반지하 주택(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연면적 또는 세대수의 20%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85㎡ 이하)의 임대주택으로 계획해야 한다.

SH공사는 공모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후 건립되는 임대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사업자는 토지 등 소유자 분양분 외 일반 물량의 미분양 우려를 줄이는 이점이 있다. 이번 공모부터는 기존에 비정기적으로 이뤄졌던 대상지 모집이 상시로 전환된다.

SH공사는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접수 확인이나 심의 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청자에게 별도로 안내 하겠다"고 전했다. /이현진 기자 hji1@

인천시, 내년 예산 15兆... 역대 최대 규모

올 본예산 대비 1.1조 증가

인천시가 내년도 새해 예산을 역대 최대인 15조원 규모로 편성해 시민과 함께하는 1000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을 준비한다.

인천광역시는 민선8기 출범 후 두 번째 본예산인 2024년도 예산안을 15조 392억 원으로 편성해 오는 11월 3일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본예산안 규모는 2023년 본예산(13조 9,157억원) 대비 1조 1235억 원(8.1%)이 증가한 규모다.

세입 예산과 관련해서는 지난해보다 늘어난 국비 확보액 5201억 원과 세외 수입 증가분 6704억 원을 반영함과 동시에 지방채를 일부 추가 발행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지방채 발행에도 불구하고 올해와 같이 총부채 규모를 9조 원대로 관리하고, 관리채무비율은 13% 내외를 유지할 방침이다.

2024년 세출 예산은 ▲연례 반복적, 낭비성 기존 사업 예산의 과감한 조정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예산안을 설명하고 있다.

▲절감된 재원은 오직 시민, 오직 인천을 위한 민생사업에 투입 ▲시민과 약속한 핵심공약의 차질없는 추진에 중점을 뒀다.

대표적인 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 약자 맞춤형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3조 733억 원을 투자하고, 사람 중심 교통체계와 연령별·가족 유형별 맞춤형 지원 등 시민복지 일선지 구현을 위해 5조 3737억 원을 편성했다. 또, 도시경쟁력 강화, 재난 안전도시 구현 등 글로벌 도시 도약에 6조 5922억 원을 반영했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인하대, 인문사회·환경분야 융합인재 위한 공간 조성

INHA-HUSS Green Lounge 기후위기 대응 사고·활동 펼쳐

인하대학교는 최근 인문사회 융합인재를 위한 공간인 'INHA-HUSS Green Lounge'의 문을 열었다고 2일 밝혔다.

INHA-HUSS Green Lounge는 인하대 학생들이 기후위기 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고 창의적인 사고·활동을 펼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HUSS(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는 대학 내외 협력·공유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인문사회 최고의 인재 양성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교육부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이다.

인하대는 지난 7월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환경 분야에 선정됐다.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 동안 기후위기 대응사업단을 중심으로 기후위기대응



INHA-HUSS Green Lounge 현판식에 참여한 내빈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인하대

융합전공 신설·운영, 교육 기반 개선, 학사제도 개편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명우 총장은 "인문사회와 환경 분야를 융합하는 의미 있는 사업의 시작을 축하하며 앞으로 사업단의 융합인재 양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정호 인하대 기후위기대응사업단장은 "그린 라운지는 개방형 공간으로

기후위기 콘텐츠를 인테리어에 녹이는 등 학생들이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HUSS 컨소시엄 대학과 힘을 모아 기후위기 문제의 사회적 측면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인문사회 융합인재를 양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서울시, 이-팔 전쟁 통한 방호대책 논의

서울시는 2일 오후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본 서울시 핵·미사일 방호 발전방안'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한 현안보 상황의 시사점을 공유하고 수도 서울의 빈틈없는 방호 태세를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번 포럼에는 핵 및 방호분야 국내 전문가,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안보정책자문단

을 포함 15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 첫 번째 세션에서는 '현 확장역제 전략 평가와 향후 10년 전략적 선택'을 주제로 핵 확장 억제, 핵 공유 또는 전술핵 배치, 한·미 핵 협정 보완 등 다양한 핵 정책 방안이 공유됐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서울시민 안전보장을 위한 핵·미사일 방호대책'을 주제로 유사시 경보 전파, 대피소 실효성 제고 방안이 논의됐다. /김현진 기자